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 평가와 제안

하장호_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1. 들어가며

-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인가?
 -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에 닥친 재앙적 위기가 과연 코로나19로부터 기인한 위기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정책과 예술계에 내재해 있던 위기가 폭발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과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입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가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코로나 이전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사실
 - 변화하는 문화예술생태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예술인의 삶에 조음하지 못하고 철저히 행정 수단화 되어 있는 지원구조,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화석화 된 협단체 구조 등이야말로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원인

- 지금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현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관리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
 - 문화예술 분야만을 한정해 볼 때 지금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코로나 발생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문화예술 현장의 피해상황 조사는 물론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나 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동안 경쟁적으로 만들어 왔던 문화예술 분야의 수많은 민관 거버넌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간 유지되어 왔던 최소한의 정책소통 채널들도 막혀버린 상황
 - 수많은 지원대책들과 아이디어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나 현장의 예술인들이 이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관리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재난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술은 계속 될 것인가?
 -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며 지금의 상황이 예술의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식과 도전을 통해 재난시대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이러한 주장, 담론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예술인들도 동의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의지와 낙관만으로 이겨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
 -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기반을 갖춘 예술인들만 살아남은채 예술계 안의 다양성의 토대가 붕괴되는 상황
 - 코로나란 위기에 대처하고 예술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대면 예술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만큼 예술의 종다양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지원정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p>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활동증명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사, 공연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총30억 규모 금리 1.0% 인하(2.2%→1.2%), 지원한도 증액(5백만원→1천만원), 상환기간 유예(1년거치3년상환→2년거치3년상환) <p>예술활동증명 시 코로나19 기간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p> <p>창작준비금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부여, 우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p>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정부 지원 대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경영지원센터 설치
영진위	<p>영화발전기금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 <p>피해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피해기업 우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p>방역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영세 상영관 방역용품 지원(200개 극장 5,000개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코로나19 관련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에 따른 일정변경 등 허용 사업 변경, 취소에 따른 정산지침 마련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미적용 <p>예술나무로 다시 봄(코로나19 모금 캠페인)</p>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코로나19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 총 200건 선정, 10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2억) <p>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확대</p>
국립국악원	<p>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ON'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공연예술가(개인) 공연영상 및 프로필 제작, 공연 영상 공개 출연사례비 100만원~160만원 차등지급 10분내외 1작품, 총31명
문화체육관광부	<p>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미만) 방역물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L 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p>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부 특별융자(1000억)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2000억) <p>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성금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직원 성금 3천만원 예술인복지재단 기탁

	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예정)
	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예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 지원(예정)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정)

- 문체부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구조
 - 문체부의 코로나19 지원은 대부분 문체부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구조이며, 해당 기관에서 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지원을 활용하는 형태가 많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 초기부터 기존 핵심사업을 코로나 피해 구제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영진위 역시 영화계 피해 상황에 따라 관련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
 - 이러한 소속기관들의 관련 대응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문체부 내 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 확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
 - 코로나 발병 이후 산발적으로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이를 문체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업 안내를 위한 창구 정도의 성격

2) 지자체 지원정책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활동 코로나 피해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 장르별, 예술일반(공간기반기획) • 작품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
	예술교육 연구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활동 예술인(개인) • 건당 200만원 상금, 총 100건(명) • 정산없음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활동 예술인,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젝트 그룹 • 건당 1000만원 내외, 총 30건 내외(총 330백만원)
	예술인(문화예술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활동 문화예술 분야 독립/프리랜서 기획자(개인) • 190 시간 동안 기획, 실행, 담론 유형중 택 1 • 건당 200만원, 총 120명 내외 • 정산없이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활동 예술인(단체), 예술기획자 등 • 재난 속 예술인의 일상기록/예술창작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안 • 건당 50만원~1,500만원, 100 건 내외 • 1차 아이디어 지원(50만원,100건내외), 2차 아이디어 실행지원(3백만원~1천5백만원, 40건내외)

인천문화재단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당 30만원 지급(약600명) •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 수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과 중복 가능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거주 예술인, 인천시 거주예술인2인 이상, 인천시 소재 예술단체 및 법인 • 건당 최대 500만원(지원총액 4억) • 영상 제작을 위한 출연료, 공간사용료, 영상제작비 지원(출연자 1인당 50만원 이내, 공간사용료 50만원 이내, 영상제작비 50만원 이내, 단체 경우 기획자 1인 50만원 이내) 개인별 지급 •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대관료 피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내에서 대관 취소로 해당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대관료 피해 증빙
	소독방역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내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예술단체 사무소 및 연습실 등 • 공간 소독 지원 및 손세정제, 소독약제 등 물품 지원 •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영등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소재(거주)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 개인40만원/단체 최대 500만원, 총 1억원 규모 • 창작준비금, 콘텐츠 제작비, 인건비, 공간운영비, 리서치 등
	영등포 지역문화예술인 대출보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소재(거주)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 총액 1억원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새마을금고를 통해 개인 100만원, 단체 최대 500만원 • 연금리 1.5%, 연내 자유 상환 방식
	지역상생 문화 협력 지원(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환경개선, 공연, 예술간판 제작 등
	아트뱅크(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문화재단 기획 사업으로 별도 추진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주소지,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 된 전문예술인 • 1인당 100만원 이내 • 기초창작활동계획서 근거로 지원 선정 후 선불카드 지급
수원문화재단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예술로 다가서기’ - 지역문화자원 기획사업 ‘도도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일상을 연결하는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실행기간: 5월~8월, 프로젝트당 최대 500만원
대구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공연업·전문예술단체 분야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단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 불가
부산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예술인 특별지원사업 지정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과 지원
	소규모 예술공간 방역 지원

- 예산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한 기존 지원 사업의 변용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예산의 확보나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구적인 형태로 코로나 긴급지원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 중
 - 별도 재원 없이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다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여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
 -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 지원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함
-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식의 실험
 -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실험적인 운영 모델이 제시 되기도 함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소액다건의 경과형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수행에 따른 예술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는 꺼려 했던 예술인,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대책을 내놓기도 함. 영등포문화재단의 대출보증 지원도 기초 단위 지원으로는 새로운 모델로 볼 수 있음.

3) 코로나19 지원정책의 유형

- 예술인 직접 지원
 - 예술인들에게 직접 현금지원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별도의 정산이나 사후 증빙을 요구하지 않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 인천문화재단의 긴급재난지원 등
 - 생활위기의 예술인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음
- 뉴딜형 지원사업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 시민들의 향유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문화사업 을 기획하고 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해 지원
 -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참여자로 인건비를 지급 받으며 별도의 정산이나 증빙을 하지 않음
 -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확인의 의미도 있음
 - 주민 대상 온라인콘텐츠 개발, 배란다음악회와 같은 기획들이 해당
- 유동성 지원
 -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 금액으로 보면 가장 큰 규모로 회당 지원금액도 큼
 - 코로나로 인한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출 사업 외에 단체나 기업의 대출은 문화예술 관련 별도 지원트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프리랜서 작업자들의 경우 제한이 많음

○ 공모형 지원사업

- 창작활동지원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지원책
- 성격상 뉴딜형 지원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많으나, 작품에 한 심사와 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과 증빙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실적으로 별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예산전용의 한계, 보조금 사업 관련 행정사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공모방식의 확대에 코로나 지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음
- 공모형 지원은 사업 수행 환경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활동의 전망이나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술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공모 사업과 같이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결과가 아닌 경과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산 및 결과보고 과정을 간소화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이 제시되고 있기도 함

○ 기존 보조금 사업의 운영 유연화

- 코로나 대책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원사업 중심의 한국 예술활동의 구조상 중요한 내용 중 하나
-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의 연기, 포기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해외 사례의 경우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환수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해당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 아르떼의 교육지원 확대와 같은 코로나 기간 중 예술인 교육지원
- 국립국악원의 프로필 제작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사례비 지원
- 아르코의 후원(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 지원

4) 해외사례

독일1)	연방정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자 즉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곳 경우 대상 • 총500억 유로(약68조) 규모 • 추후 반환이 필요 없는 즉시 지원금 • 5인 이하 사업자는 3개월간 9천 유로(약 1,200만원), 직원 10명 이하 사업자는 3개월간 최대 1만5천 유로(약 2,020만원)
		공공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반환 요구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의 경우 지원금 반환 요구 포기
		단축노동지원금, 세금,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노동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세금 부과 및 선납 연기, 연체 및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 완화
		예술가보험 납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예술가도 가입하는 공공보험 시스템의 보험료 경감

	<p>영화진흥청-지원비용 환수 포기과 확정된 지원금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및 배급 문제에 따른 대책 · 기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는 취소시 비용 환수 포기, 연기 시 기 확정된 지원금 보장 · 750만 유로(약 101억원) 투입, 이후 250만 유로(약 34억원) 추가 투입 <p>음악저작권협회 긴급 지원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4천만유로(약533억원)의 기급지원금 조성 · 1인당 최대 250유로(34만원)의 긴급 지원
지방정부	<p>[베를린] 2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 문화시설 등 적용 · 건당 최대 50만유로(6억7천만원) <p>[베를린] 5인 이하 소규모사업자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억유로(약 1,349억원) 규모, 1회 5000유로(약 674만원) · 개인인 경우 6개월 이후, 2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p>[바이에른주] 문화 및 창조분야 종사자 대상 유동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00억유로(약15조) 규모, 2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3만유로,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및 개인은 최대 5,000유로(약674만원) <p>[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보험에 가입된 예술가 중 피해증명서 제출자 지원 · 1인당 최대 2천유로(약 270만원) 긴급 지원
영국 ²⁾	<p>일자리유지 및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극장 및 예술단체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 정리해고 금지, 임시 휴가 중인 직원에게 임금 80% 지급(약380만원 상한) 등 <p>영국 예술위원회 긴급 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약 1억6천만 파운드(약2,400억) 규모 · 올해 지원단체의 경우 사업기한 연장과 추가 지원(약1,370억 규모), 올해 미지원 단체 대상으로는 5천만 파운드(약760억) 별도 편성 지원 · 프리랜서 예술가 대상으로는 2천만 파운드(약306억) 규모로, 1인당 최대2500파운드(약380만원) 현금 지원 · 이상의 지원은 '생존자금'으로 분류되어 3월30일부터 6주내 집행
대만 ³⁾	<p>코로나19 피해 예술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억 대만달러(약6백억원 규모) · 스태프인건비, 행사취소에 따른 환불비용, 임차비 등에 대한 피해액 보상 · 예술가들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 관련 바우처 발행 <p>기 지원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일정 조정, 선금 교부 확대, 사업 추진 정차 간소화 등

○ 문화예술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

- 유럽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뒤늦게 시작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련 지원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임
- 유럽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크게 피해예술인(단체) 긴급지원, 일자리보장, 활동유지를 위한 유

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정책/이슈] 코로나 19 위기 속 독일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이유진

2) 예술의전당 웹진 4월호 '코로나19사태에 대처하는 영국의 자세', 김준영PD

3)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신속하고 단순하게, 해외 팬데믹 문화예술 대응', 김신우 독립PD

- 동성 지원, 세금감면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음
- 대만의 사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지원책도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의미한 접근이라 보임
- 다양한 예술주체를 고려한 지원정책
 - 독일이나 영국 사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유동성지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단체)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문화 분야와 창조인력에 대한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민간, 민관협력형 지원
 - 해외 사례의 경우 위의 표에 정리된 내용 외에 민간영역 또는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부조와 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눈여겨 볼 사례
 - 미국의 민간재단의 긴급구호기금 마련
 - 영국의 공연계 단체들의 theatresupport.info 사이트 구축
 - 영국 배우조합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정신과 상담 지원, 돌봄 지원

3.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지원 정책 평가

-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정책의 부재
 - 지금까지 문체부가 내놓은 코로나 관련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기존 기관 사업의 확대와 메르스 당시 내놓았던 대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한 홍보나 문화시설의 감염예방, 종교계 대응과 같은 정부의 ‘공보’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 온 것처럼 보임
 - 문화예술생태계의 보호, 지원사업의 운영, 피해예술인 구제 및 지원, 문화예술계 일자리 보장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정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기적 처방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가장 기본이 되는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협회 등에서 진행된 것을 제외 하고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른 정책 수립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공모형 지원사업의 흥수
 - 코로나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조금사업, 지원사업 등을 변형한 ‘창작지원’ 형태의 공모사업이 코로나 지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
 - 공모형 지원사업은 예술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줄 세우기가 될 수 있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오히려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예술현장에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공모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문제의 소지도 존재

-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관점의 부재
 - 공연예술 분야만 한정해 보더라도 공연예술생태계 안에는 창작자, 기술스텝, 기획자, 극장(공간)운영자, 평론가, 관객 등 수많은 주체와 공간, 활동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침
 - 때문에 생태계 자체에 대한 고려와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이미 1+1 티켓 지원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이전 감염병과 달리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는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
- 새로운 지원구조의 실험과 가능성
 - 일부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지원사업들의 경우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코로나 지원의 형태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임
 - 지원사업의 형식이지만 예술가(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의 형태로 예술활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성은 더 높이고, 지원사업의 절차적 부담은 줄이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이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의 변화를 공식화 할 수 있는 후속 논의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

4.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

- 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정책의 수립
 - 예술현장의 피해 상황을 반영하고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
 -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재난 이후 예술환경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전혀 새로운 지원정책의 설계를 위해서는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설계, 공론장의 형성, 문화예술행정의 변화가 함께 필요
- 예술인 직접 지원을 통한 생존권 보장
 - 장기적인 정책과제와 별개로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직접지원이 필요
 -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 더욱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 예술 주체의 생존 문제는 예술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생태계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
 -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가 분명히 계측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후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
 - 가령 유동성 지원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프리랜서 형태의 예술인들은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창작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창작주체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트랙에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변화하는 창작 환경과 예술인 권리 보장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예술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의 방식들이 도입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공연제작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는 이후 공공지원을 통한 제작과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

5. 코로나19 및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정책 및 사업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 피해조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사례 접수 방식의 조사가 아닌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정량적 조사 외에도 간접적인 피해상황이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의 발생까지 포함하는 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 수립 필요

○ 예술인 직접 지원의 확대

- 창작준비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직접 지원 확대

○ 지역 중심의 지원 구조 마련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단위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권리보장법 우선 도입

-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예술인고용보험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
- 21대 국회의 우선처리 사안으로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추진

○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예술인 복지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
- 예술인복지법 제정 초기부터 이러한 기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관련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나 재원확보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사업 운영제도 개선

- 프로젝트나 결과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예술인이나 단체 지원 중심으로 보조금 사업 개편 필요
- 이를 위한 보조금 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 마련

○ 코로나19와 재난사회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회의

-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와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 구조 마련부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당사자 운동이 필요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특정장르, 특정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예술계 협력구조 마련